

인천일보

2020년 12월 11일 (금)  
01(경기판)면 중합

# “남북 멈춰선 시계 작동하려면, 공단 다시 돌려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 함께 일하던 작은 통일공간”  
“비핵화 프레임 벗고 경제교류를”  
유엔사집무실 승인 지연 비판도

“남북의 멈춰진 시계를 다시 작동하려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일 개성공단 재개가 갖는 의미를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2004년 문을 연 뒤 누적 생산액이 3조8000억원에 이른다. 남북 노동자 5만명이 함께 일하며 작은 통일을 이루던 공간이었다”며 “특히 개성공단 조성으로 북한의 군 기지가 10km 후방으로 물러나는 등 남북관계의 안전판이었다. 하지만 2016년 전면 폐쇄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후퇴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만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서 “오랜 기간 멈춘 남북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경기도와 국민의 염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유엔사의 도라산 전망대 집무실 승인 지연을 비판했다.

그는 “군사 목적이 아닌 도 고유 행정을 위한 집기 설치까지 막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사 부분에 한정된 유엔사의 권한은 존중한다. 하지만 정전협정의 기본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0일 “남북의 멈춰진 시계를 다시 작동하려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넘게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오는 15일엔 이를 위한 삼보일배에 나선다. /사진제공=경기도

정신인 한반도 평화 증진에 부합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오는 15일 진행할 삼보일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125개 입주기업이 북쪽에 9000억에 달하는 자산을 두고 온 상태다. 그러면서 경영난 등 삼중고에 시달린다”면서 “남북 정상이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3개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는 뜻에서 삼보일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비핵화에 간

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적인 경제 교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를 앞세우면 남북의 멈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없다”며 “개성공단을 발판 삼은 경제 교류야말로 평화로 가는 오솔길이다”라고 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도라산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면 11월9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다. 그런 뜻에서 이곳에 임시 집무실을 꾸렸다”며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 교류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평화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건넌다”고 밝혔다. /한신법 기자 hss@incheonilbo.com

## 이재강, 15일 개성공단 재개 촉구 '삼보일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평화부지사는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0.9km 구간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삼보일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온라인 125배' 행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125배는 개성공단 125개 기업을 상징하며, 오는 15일은 지난 2004년 개성공단서 만든 '통일냄비'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판매된 날입니다.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協, 접경지 인천·강원은 빠지나

전국시도지사협 복위와 '성격 유사'  
인천시 "한곳 집중" 강원도 "고민"  
경기도, 참여 확대 모집기간 늦춰  
"지방 주도 의미"... 44곳 참여 의사  
출범식 내년 1월 연기 '온라인 진행'

출범을 앞두고 도는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막바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작 북한과 접경지역인 인천시와 강원도의 참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비슷한 성격의 협의체들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통일부 주관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 측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있기에 한 곳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측은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12월 1일자 1면 보도)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도는 지방정부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접경지역인 인천시와 강원도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이 오는 2021년 1월로 연기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인 만큼 더 많은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간이 늦춰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측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기본 위치는 비슷하지만(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을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국 단위 협의회로 하기 위해 추가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내년 1월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왔다. 도가 축적한 남북교류 협력 지식을 공유하면서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협의회 구성에 힘이 실렸다. 개정 전에는 민간 단체 등을 통해서만 지방정부가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까지 지방정부 4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 서울 중구, 부산 금정구·남구·동구·연제구, 울산 울주군, 충청남도 당진시·부여군,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고성군·통영시가 그 대상이다.

7남북성7가 nam@kyeongin.com

# “접경지는 남북교류 중심... 국경 초월 경제모델 그려야”

## 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

온라인 생중계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  
“70년간 규제... 상권 살릴 특별법 추진”  
“광역 단위 넘어 수도권 불균형으로 봐야”  
“생태·4차산업 결합한 대체산업 육성”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접경지역 최대 현안인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과 군부대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의 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신문사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혁신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한 '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따라 50명 미만으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서울신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분할 화면으로 비쳤다. 1부 주제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이의영 군산대 교수의 진행으로 조유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한 한림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동성 경기연구원 균형발전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중환 파주시장, 조인목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경철 인천군수,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본부장, 한경구 균형위원회 정책협력관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 조인목 양구군수는 개회사에서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면서 “접경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과 투자 유치를 견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현 서울신문사장은 환영사에서 “시각에 따라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접경지역은 평화의 시대,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는 남북 교류의 중심지”라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은 아직 광역 단위 시도의 불균형에 집중하지만 향후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상 축사를 보내 왔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은 최근 경제 국면이 이어지는 남북 관계가 개선돼 접경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면 지역의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범수 강원연구원 센터장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접경지역 산업구조는 공공행정 의존도가 높아 민통선 접근 통제나 기타 위기 상황에 군인 외출·외박이 중지되면 상권이 침체되는 일이 반복된다. 국방개혁 2.0을 지역 산업구조 체질 개선의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기존의 지역 강점인 생태자원과 4차산업기술을 결합한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경제권의 신성장 엔진, 한반도 메가리전’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세계적으로 접경지역은 양쪽이 공간적으로 대칭되는 트윈시티 형태로 발전한다”면서 “남북의 국경을 초월하는 통합 도시경제권 모델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희라 기자 hira@seoul.co.kr